

# ISSUE & FOCUS

Newsletter 2017-8

##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관심사항과 우리나라의 대응

정인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한미 정상회의 이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우리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은 조기 개정협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월 12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통보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새로이 출범하는 통상교섭본부 본부장(대외직명 통상장관)이 임명되지 않았으므로 협의 시점을 늦추고, 개정 협상을 원하는 미국이 우리나라로 와야 함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미 FTA 파급영향을 평가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한다. 워낙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한미 FTA 개정 협상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

### NAFTA 재협상 목표 공개

지난 7월 17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목표 요약'을 공개했다. 제목은 요약으로 되어 있는데, 총 17페이지에 걸쳐 미국의 협상 목표를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다. 한미 FTA와 달리, NAFTA에 대해서는 재협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정 협상은 문제가 되는 부분에 한해 수정하는 것인데 비해, 재협상은 협정 전체를 손본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당사국들은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협정으로 개정한다는 협상목표를 간단하게 제시하는 짧은 보도자료가 일반적인데, 미국은 아예 구체적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기관 보고서임에도 서두부터 예사롭지 않다. NA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옮겨 놓은 듯하다.

보고서 서언의 내용을 정리하면, 발효된 지 23년이 지난 NAFTA 협정은 오늘날 미국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하고, 재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적극 반영해야 함을 적고 있다. NAFTA가 미국 농민과 목축업자에게는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했지만,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노동자에게는 고통을 초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역적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수천 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실직했음을 들어 NAFTA를 ‘나쁜 협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NAFTA가 미국인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고,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재협상을 통해 이러한 NAFTA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이를 실행하기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과감하게 처리하려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 6월 대통령 후보로서 약속했던 NAFTA 재협상을 이제 실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지지층인 블루칼라 계층 및 러스트 벨트 유권자에게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각인받고 싶어 하는 듯하다. 어떤 측면에서는 재선 운동을 위해 무역협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미국의 최대 관심사, 무역수지 불균형 시정

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 방법이 적절하지 않지만, 23년이나 된 NAFTA를 현 시대 상황에 맞게 수정하자는 것은 일견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미 FTA는 이행 5년차일 뿐만 아니라 미 통상당국이 가장 모범적인 협정으로 간주하고,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서도 기본 교과서로 사용했었다. 즉 현 시점에서 협정 개정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FTA 그 자체보다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 축소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불균형 확대, 자동차와 철강 수출을 언급했었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대미 흑자 품목이다. 우리나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수출을 억제하지 않고는 전체 무역수지 적자 감소가 어려운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 방지가 목적도 있었다. 철강은 러스트 벨트를 대표하는

산업이고, 우리나라가 17억 달러 정도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 증가의 원인은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찾아야 한다. 소득보다는 더 소비하는 관행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을 상대국에서 찾고자 하며, 보조금 지급, 환율 조작 등을 들어 수출국이 공정무역을 하지 않는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입장을 청취해 봐야 명확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알아서 무역수지 적자를 감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 심지어 협정 폐지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사드 등 안보문제와 통상현안을 결부시켜 우리나라를 압박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입지는 제한되어 있다. 민간 기업의 수출을 정부가 나서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최대 수혜업종인 자동차를 한미 FTA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다행인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통상실무자들은 경제통상 논리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미 당국자들도 대통령의 지침을 따르려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경제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 FTA 이행 및 파급효과 공동 연구 제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통상교섭본부가 부활되었다. 하루 속히 본부장을 임명하여 미국과의 협상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정부 시절 약화된 통상역량을 한미 FTA 협상 시절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각 부처에 흩어진 통상인력을 결집하고, 민간 전문가의 자문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제1차 협의에서 한미 FTA 파급영향을 평가팀 구성 및 운영을 정식으로 제안해야 한다. 서둘러 국내 연구팀을 조직하여 한미 FTA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사용했던 수출입 총액(액면)보다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양국 간 수출과 수입을 평가해야 한다. 수입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부가가치는 수출 액면가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미국이 흑자를 누리는 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가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로 인한 부가가치까지 고려하면 부가가치 기준으로 미국이 오히려 무역수지 흑자를 누릴 수 있다.

미국 내 통상전문가 및 정치권, 산업협회, 비정부기구(NGO) 등과 연대하여 무역협

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무역협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이 적지 않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 교수는 트럼프가 무역정책의 기본을 모르는 것으로 폄하하면서 즉흥적이면서 논리성을 결여한 트럼프의 정책은 얼마 안가 벽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통상관계자들도 무역협정에 대한 대통령의 비판적인 시선에 당혹해 하면서도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침을 일정 수준 따라가면서도 경제통상 논리에 따라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NAFTA 재협상 목표 자료를 보면, 서언과는 달리 협정의 내용을 논의하는 부분에서는 통상이슈를 중립적인 관점에서 적은 것을 평가된다. 즉, 서문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때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적도 있지만, 현재는 다수 국민이 한미 FTA 협정 유지를 지지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개정 압력은 자칫 미국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 우리 측은 공동연구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미 개정 협상 논의가 시작되었으므로 국내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 협상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윈-윈’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산업계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